

‘쌀’ 한 톨에 담긴 기억과 전략

자치CEO

강진원
강진군수



1970년대 어느 여름, 초등학교생이던 내게는 ‘농번기 방학’이 있었다. 공식 명칭은 없었지만, 교육당국도 묵인하던 일주일 남짓의 특별휴가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못줄을 잡고 논두렁을 달려가면, 엄마는 흙 묻은 손으로 이마를 쓸며 “왔냐” 하셨다.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먼저 자숙한 신작로를 달려가면 논둑 너머 아버지의 등이 보였고, 논두렁 소풍의 점심상엔 보리밥에 김치, ‘생멸치와 묵은지를 자작하게 지진’ 반찬이 놓였다. 그 시절의 모내기는 노동이면서도 가족의 기억이었고, 농사는 생명을 일구는 의식이었다.

2025년의 들녘도 어느덧 모내기를 마쳤다. 논은 다시 물거울이 되어 하늘을 품고, 땅은 올해의 쌀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올봄, 인접국 일본에서는 전례 없는 ‘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레이와 쌀 소동’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격 폭등이 아니라, 기후변화, 장기적인 감소 정책, 투기성 사재기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겹친 복합 위기다. 1년 새 쌀값은 두 배로 치솟았고, 슈퍼마켓에는 쌀 판매를 제한하는 안내문까지 등장했다. 시민들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생활인구’의 급증이다. 202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687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이 소비한 초밥, 오니기리 등 쌀을 기반으로 한 음식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본 내 쌀 수급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관광객은 단순한 체류자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실제 소비자이자 식량수급 구조의 일원인 셈이다.

이 현상은 우리가 오래도록 간과해 온 사실 하나를 떠올리게 한다. 식량은 생산만이 아니라 ‘소비’의 구조까지 고려해야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강진군의 ‘생활인구’ 증대 전략은 시사점을 던진다. 2025년 강진군은 ‘반값여행’ 정책으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입시켰고,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생활인구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농촌경제에 실제로 소비와 순환을 일으키는 ‘이동하는 생활자’였다.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전략이 단지 실험이 아닌, 국제적 흐름 속에서 유효한 대응임을 증명한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강진에서 생산된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정한 물, 해풍, 그리고 농민들의 정성으로 키워낸 고품질 강진쌀은 일본의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통과해 현지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강진군과 농협의 전략적인 농업 정책과 투자 덕분이다.

강진군과 농협은 인근 지자체보다 40kg 한 가마당 4500원이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

상을 제공했다. 이러한 고수매가 정책은 농가의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강진군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는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453종의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과 더불어, 일본 검역당국이 요구하는 카드뮴 등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수출의 문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 기업과는 즉석밥 가공용 쌀 납품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했다. 강진군의 이 같은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농업정책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농업의 산업적 가치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한때 “농사 지어선 못 먹고 산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이제 농업은 세계 시장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강진쌀의 일본 수출은 그 전환점에 선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쌀은 단지 우리의 주식이 아니다. 그것은 식량안보의 뿌리이자,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노동과 기억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논은 생태계의 허파이고,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인류의 균형을 지탱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오늘도 고개 숙여 모를 심는 농부의 얼굴이 비친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인사드릴 차례다. “모내기를 마친 농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땀으로 자란 한 톨 한 톨이 우리의 밥이 되고, 기억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독자투고

경찰 채증은 단순한 활영을 넘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기록’이다.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2조는 채증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촬영·녹화·녹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집행 절차이다.

하지만 채증에 대한 시선이 늘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

채증은 ‘감시’가 아닌 ‘공존’의 시작

라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질 때, 자유로운 표현에 위축을 느낀다고 말한다. 채증 영상 속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그 관리와 활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래서 경찰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채증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경찰개혁권고안 등을 반영해, 채증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 없는 자료는 집회 즉시 폐기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왔다.

채증의 전 과정은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소중한 가치를 함께 지켜가야 한다. 채증은 이를 위한 소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의 렌즈가 국민의 시선을 의심이 아닌 신뢰로 마주할 수 있는 사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민주 공동체의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모습이다.

문가원 <구례경찰 경비안보과 순경>



기고 정영수 (재)한국산업교육원 광주지부장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을 제안한다

한국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경제환경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글라 파동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큰 영향을 줬다. 새로운 이재명정부가 출범에 따른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게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민간주도와 공급확대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시행했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매수가 관망세였는데 최근 경제를 살리는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수도권 등 핵심지역은 매수세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했지만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관망세로 변했다. 하지만 지방의 미분양시장은 심각수준에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역시 상승압력(공급 부족과 금리인하)과 하락 압력(경기 침체 우려와 대출규제)이 맞물려 있어, 어느 때보다 방향을 가능하기 어렵다. 최근에 서울권은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여왔는데 대출규제 발표로 수요자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급격한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이다. 2025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인 미분양은 7만1997호로 늘었고, 지방은 5만7342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이 증가하는 원인은 고금리에 따른 대출부담증가, 경제불확실성으로 인한 실수요자 관망세, 분양가 상승 등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암울하기만 하다. 부동산 시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가파른 침체에 접어들어 정부의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까지 ‘3고(고분양가·고금리·고공사비)’ 악재

가 겹치면서 한국경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연구원에 따르면, 건축공사비 지수는 130.26을 기록했는데 3년 전 3.3㎡ 공사비는 470만~500만원대에서 최근 1000만원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건설업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과 건설업체에 정치 불확실성 확대,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지방의 미분양 증가에 따른 공급감소, 거래 절벽으로 자금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건설비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암울하기만 하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건설사 뿐만 아니라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계 다양한 신용주체가 PF시장에 맞물려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위기 당시보다 우발 채무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DTI 등 대출규제 완화,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완화정책,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육성, 세제제도를 완화해 미분양이 집중된 곳에 균분을 피워 정상적인 거래가 활성화하도록 지속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상 임대 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공급량증대 혹은 수요억제를 중심으로 놓는 정책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만 현재의 부동산 딜레마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며 한국경제를 ‘실용과 민생 중심’으로 이끌어 갈 것을 천명하며 증세없는 복지, 규제 완화, 부동산 정상화와 공정시장경제를 이끌어 갈 것을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을 적극정책으로 실현해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에서 벗어나 선량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